

중앙선관위가 투표참여 선거인에 지급하기 위해 마스크 예산 501억원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 등에 대한 입장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273번  205번

중앙선관위가 '코로나19 관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검토 중인 투표소 내 마스크 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난 3. 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중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은 투표소 내 선거인 대상 마스크 지급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쳤으나, 예산 확보는 물론 공적 판매중인 마스크의 물량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국가기관(선관위)의 대규모 물량 확보에 따른 공공·민간부문 수급 불완전을 고려해야 하므로 선관위는 선거인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홍보할 방침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관위가 보다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마스크 지급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는 투표참여 선거인에게 마스크 지급 시 50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필요물량의 확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3. 12.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참여 선거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방침을 정하여 소요예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며, 행안위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및 이와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입장을 제출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